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힘내라 대한민국

2020년 12월 14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2.13.(일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0. 12. 11.(금)	담당부서	지역경제진흥과
담당과장	박덕열 과장(044-203-4420)	담 당 자	양영훈 사무관(044-203-4426)

산업부, 지방투자보조금으로 지역경제 위기극복 지원

- 72개 기업에 보조금 3,475억원 지원 결정 -
- 민간투자 1조7천억원, 지역일자리 4,074개 창출 유도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: 성윤모)는 올해 다섯 차례의 「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」(12.9, 제5차)를 열어 지방투자기업 72개사에 보조금 3,475억원(국비 2,553, 지방비 922)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.

○ 이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기간(최장 3년) 중 지방투자 1조 7,529억원, 일자리 4,074개*가 새로 만들어진다. 작년과 비교할 때 투자액은 20.2%(2,941억원), 신규 일자리는 21.5%(720명) 늘어난 수치이다.

* 투자기간 내 신규 채용하고, 투자완료 후 최소 5년간(사업이행기간) 일자리가 유지됨

□ 올해 보조금 지원 기업들은 투자 및 일자리 규모 확대와 함께, ①상생형 지역일자리 투자 본격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모델 구현, ②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경기 회복, ③소재·부품·장비 분야 생산시설 확충에 따른 공급 안정화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① 먼저, 지난 6월 15일 국내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*로 선정된 바 있는 ㈜광주글로벌모터스는 광주시 빛그린산업단지에 11만7천㎡ 규모의 공장을 건설(투자비 4,197억원) 중이다.

* 통상적인 기업투자, 일자리 창출을 넘어 노·사·민·정 간 대타협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

- 내년 하반기에 연간 7만대 규모의 경형 SUV 양산체제에 돌입, 908명을 채용하게 됨으로써 적정 임금·근로시간과 동반성장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.

《 상생형 지역일자리 투자 개요 》

ㅇ 투자기업: ㈜광주글로벌모터스 (광주그린카진흥원, 현대자동차, 광주은행 등 지분 참여)

ㅇ 투자규모 : 4,197억원 (부지 매입, 공장 건설, 기계장비 설치 등)

ㅇ 투자기간 : '20.1.~'21.10. (투자완료 시 신규고용 908명)



② 다음으로, 군산시, 창원시 진해구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투자와 보조금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.

- '18년 5월경 9개 지자체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*한 이후 그 해 하반기에는 보조금 신청이 4건에 머물렀으나, '19년부터 투자가 본격화되어 '19년 12건, 올해 11건으로 보조금 신청이 꾸준하게 이어졌다.

  * **위기지역 지정현황** : 전북 군산시, 울산시 동구, 경남 거제시·통영시·고성군·창원시 진해구, 전남 목포시·영암군·해남군

  * **보조금 우대** : (입지보조금) 30%→50%, (설비보조금) 14%→34%

- 이에 따른 올해 투자 규모는 총 2,244억원(보조금 772억), 신규 일자리는 752명에 이른다.

③ 한편, 반도체 소재, 스마트폰 부품 등 핵심전략기술 품목의 양산체제를 구축,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개 기업이 익산시, 천안시 등에 731억원(보조금 201억) 규모의 생산설비 증설에 나선다.

- 이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·부품·장비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부의 투자보조금 우대 방침*과 기업의 관련시장 공략 의지가 합쳐진 투자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.

  * 고시 개정('19.11.) : (입지보조금) 30%→50%, (설비보조금) 14%→34%

□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방 신·증설,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등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설비보조금은 최대 34%, 입지보조금은 최대 50%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.

○ 산업부는 민간의 투자 의지를 북돋우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확산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하여 신·증설 보조금 지원대상 업종을 확대*하고 신규고용 요건을 완화**하였다.

- 이와 함께 투자 착수 단계에서 설비보조금의 70%를 선지급하던 것을 감염병위기경보 심각단계 기간에는 80%까지 선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.('20.5.26. 고시 개정)

* **(기존)** 제조업·정보통신산업·지식서비스산업 중 지역집중유치업종, 주력산업, 광역협력권산업 등으로 제한 → **(개정)** 제조업·정보통신산업·지식서비스산업 전반으로 확대

** **(기존)** 대기업 100명, 중견기업 50명 이상 → **(개정)** 대기업 70명, 중견 30명 이상

○ 아울러, 새로운 일자리 유형으로 주목받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분야 투자보조금 지원한도를 국비 최대 150억원(기존 100억원)으로 상향('20.11.2.)하는 등 지방투자 활성화 정책 수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해오고 있다.

□ 산업부 김현철 지역경제정책관은 올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성과를 점검하면서 "앞으로도 보조금의 국가균형발전 효과를 높이고, 지역 산업 진흥 전략 등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"고 밝혔다.

【붙 임】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개요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양영훈 사무관(☎ 044-203-442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**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개요**

□ **(추진경위) 균특법** 제정과 함께 **지방투자 촉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**을 위해, '04년부터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

○ 지자체 및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방 신·증설 투자('11년), 개성공단 입주기업('14년), 상생형 지역일자리('20년) 등으로 지원을 확대

* (관련 규정)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,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(산업부 고시)

□ **(지원내용)** 지방투자기업의 **입지·설비 투자**에 대해 지역별·기업규모별로 **투자액의 일정비율**에 해당하는 **보조금**을 차등 지원

<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비율 한도 >

지역 구분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	매칭비율 (국비:지방비)
수도권 인접지역	(입지) 0% (설비) 6%	(입지) 0% (설비) 8%	(입지) 9% (설비) 11%	45 : 55
일반지역	(입지) 0% (설비) 8%	(입지) 10% (설비) 11%	(입지) 30% (설비) 14%	65 : 35
지원우대 지역	(입지) 0% (설비) 11%	(입지) 20% (설비) 19%	(입지) 40% (설비) 24%	75 : 25
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	(입지) 0% (설비) 14%	(입지) 25% (설비) 24%	(입지) 50% (설비) 34%	75 : 25

□ **(지원절차)** 지자체가 투자기업 유치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, 산업부는 사업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 결정

< 지방투자보조사업 진행 절차 >

